

또... '바닥' 안보이는 층간소음 갈등

몸싸움 지켜보던 중학생 황기 흥기 광주 노후 아파트 전국 최고 바닥 두께 얇아 분쟁 빈발 소음 줄임 바닥쿠션 지원 등 필요

지난 15일 밤 9시 30분께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선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간 몸싸움에 이어, 이를 지켜보던 중학생이 흥기를 휘두르는 일까지 발생했다.

A(50)씨의 아파트에 사는 B(38)씨가 겪은 지난 1년 동안 수차례 "늦은 밤까지 소음이 심하다"며 경비실과 A씨 가족에게 주의를 요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사건 당일에도 A씨의 집을 찾아가 층간소음을 항의했고, 결국 말다툼이 주먹질로 이어졌다. 당시 집에 있던 A씨의 큰아들(20)까지 싸움에 끼어들면서 성인 남성 3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이를 지켜보던 A씨의 중학생 아들(13)이 "그만 좀 하라"며 집에 있던 흥기까지 들고 나왔고, 겁이 난 B씨는 계단을 통해 경비실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개가 늦은 시간까지 짖는다며 50대 남성이 옆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흥기를 휘둘렀다가 입건되기도 했다. 광주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16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층간소음 상담 건수(온라인·콜센터·현장진단 측정접수)는 2016년 456건, 2017년 653건, 2018년 756건 등으로 매년 100건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층간소음 원인으로는 아이들이 뛰는 등 발걸음 소음이 70.6%로 가장 많았으며 망치질 4.1%, 가구(끌거나 짚는 행위) 3.4%, 문 개폐 2.0%, 진동 1.8% 등이었다.

광주에서 아파트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 주거(40만 6000가구·전체가구 48만 8000가구) 비율이 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층간 소음이 심한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비율(50.83%)도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신축한 아파트는 건축기준에 따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 콘크리트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돼 있지만, 이전에 지은 노후 아파트들의 바닥 두께는 이보다 40% 정도 얇은 120mm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의 구조상 층간 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만큼 소음의 주원인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아파트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에 따른 현장진단 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아이들의 발걸음 때문에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이웃배려 교육 등을 하는 것도 좋은 해결법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여기에 노후 아파트에 한해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바닥쿠션 지원 등 제도적 지원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광주시의 경우 이 같은 층간소음 등 주민간 빚어지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5년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통해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총 340건의 층간소음이 접수됐지만, 분쟁 조정 후 일부 해결 여부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빠르면 오는 4월부터 마을분쟁해결센터를 확대해 마을에서 생기는 층간소음 등 주민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형 확정

방송 간섭 첫 유죄...의원직은 유지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을 확정했다.

벌금형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방송에 간섭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송법 제정 이후 30년만에 처벌되는 첫 사례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빠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설 앞두고 16일 오후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직원들과 수산물품질관리원들이 말바우시장에서 제수용품인 조기와 명태 등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 신설

수사권 조정 시행령 제정 대응

검정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경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수사 권한이 커지게 된 경찰이 스스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 수사 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 본부를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전남 등 전국 지방경찰청에는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꾸려 각종 수사 개혁과제에 전국 경찰

에서 통일성 있게 정착하도록 하기로 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높이는 개혁 과제의 발굴·추진·정착 등을 담당한다.

검정 수사권 조정법은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시행할 수 있다. 경찰청은 설 명절 이후 법무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과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방직 전문가인 본부장이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 수뇌부 등 외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학계·연론계·법조계 인사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으로부터 본부 운영 관련 조언을 폭넓게 수렴한다.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은 21일 책임수사추진본부,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현판식을 갖는다.

경찰청은 이 밖에도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구의원 비난 현수막 건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지방의원이 갑질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다 다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공동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욕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남구청 공무원 A(46)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은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회의를 앞 현수막 게시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보조원들이 남구의원이면 B씨의 회의장 참석을 막고 실랑이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목적에 정당하더라도 욕외광고물법 일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본회의장 앞 실랑이는 사진 삭제 요구하려던 것이었음은 입장을 막으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방해당하고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들며 "사진 삭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도 B씨의 회의장 입장을 막고 허리춤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 공무원 노조원들과 B씨의 갈등은 2016년 12월부터 본격화됐다. B씨는 공무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의원들을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며 의회 회의에서 이를 문제 삼았고, 공무원 노조는 'B 의원은 갑질을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팻말 시위를 했다.

2017년 5월에는 B씨가 자신을 규탄하는 공무원 노조원들의 팻말을 잘랐고 2017년 6월에는 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하는 노조원을 촬영하면서 몸싸움 벌어졌다. B씨는 구의회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앞두고 자진 사퇴한 뒤 노조를 고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동차 덮친 자동차
16일 낮 12시 45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하던 K5 차량이 뒤쪽 화단과 난간을 뚫고 추락해 난간 밑에 주차된 다른 차량 위에 올라섰다. 이 사고로 추락한 차 안에 있던 30대 여성과 초등학생 2명이 119 소방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는 것은 아니었다. /광주북부소방 제공

동료 베트남인 흥기 찌르고 도주

광주광산경찰은 16일 금전문제로 동료 베트남인을 흥기로 찌르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26)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밤 11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거리에서 동

료 베트남인 B(23)씨의 엉덩이를 흥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빌려준 현금 30여 만원을 갚지않자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흥기에 찔린 B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군인권센터 "성전환 수술 육군 부사관 계속 복무하게 해"



○...군인권센터가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성별정정 절차를 밟고 있는 육군 부사관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

○...1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남성으로 임관한 A씨는 군에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히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오

는 22일로 예정된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임태훈 센터 소장은 "변호인이 육군 본부에 A 하사의 성별정정 허가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며 "A 하사는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는 젊은 군인으로, A 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꼭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